
지상좌담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 및 『KDI 북한경제리뷰』가 나아가야 할 방향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KDI 북한경제리뷰』의 학문적·정책적 우수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국내 학계 권위자를 외부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2018년 1월호부터 개편된 발행물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KDI 북한경제리뷰』의 외부 편집위원인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 및 『KDI 북한경제리뷰』가 나아가갈 방향’을 주제로 2018년 1월 17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한해 북한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시각, 대북제재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2018년 『KDI 북한경제리뷰』의 개편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8년 1월 17일(수) 오후 4시, 문학의 집 · 서울

사회

이석(KDI)

토론

김병연(서울대학교), 김석진(통일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장형수(한양대학교)



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금번 좌담회는 『KDI 북한경제리뷰』 개편과 함께 새로이 모신 네 분의 외부 편집위원들로부터 올해 북한경제 전망을 듣고, 북한경제 연구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KDI 북한경제리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현재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는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과 제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네 분은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먼저 양문수 교수님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문수: 1990년대 초 경제난 발생 이후 만성적인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경제는 2010년대 들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북제재가 이러한 추세에 중단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나 2016년 말부터 취해진 일련의 제재들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과거의 제재가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만을 금지했다면 이제는 수출, 투자를 비롯한 정상적인 대외 활동도 제재 대상이 되었고, 국제제재에서 터부시되어 왔던 민생 부문도 그에 대한 배려가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원유 부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력을 비롯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은 북한경제에 제재로 인한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제재 자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재라 할지라도 수출이나 해외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던 외화가 끊기고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와 설비 수입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민간부문에 축적되어 있는 외화가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축적된 외화의 규모를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고, 북한이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현재 제재의 강도가 경제 봉쇄에 가까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앞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과도한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여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 아니라 과거와 비교하여 북한 주민들의 위기극복

능력과 내부의 물적, 재정적 토대도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석: 양문수 교수님께서서는 최근의 제재가 과거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북한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은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될 것이나 ‘고난의 행군’에 비견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김병연: 통계를 보면,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근거가 빈약하다. 작년 12월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약 37% 감소했다. 37% 수출 감소만을 성장률로 따지면 -1.8% 정도이다. 북한의 성장률의 요인을 분해하면 약 70% 이상이 무역과 시장효과로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무역이 37% 감소했다면, 시장 거래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뿐 아니라 시장효과까지 포함시킨다면 성장률은 더욱 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북한의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는 기본적으로 -2% 이하로 본다. 또한 지난해 작황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여기에다가 다른 제재, 예를 들면 해외노동자 조기 귀국 및 파견 제한 등도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재의 효과라는 것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하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제재가 잘 작동하는 것이 협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곳은 국가기관의 외화수급 문제이다. 제재로 인한 대외상황 악화로 북한 정권과 권력층에서 거둬들이는 외화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것 같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수입품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이 막힌다면 주민들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해외에 파견되었던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나 공업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물가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작년 북한 수입이 줄지 않은 것도 시장이 공급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단기적인 완충효과가 줄어들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시장 물가는 공급, 수요 측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제재가 잘 작동하게 되면 공식통계에서 수출이 90% 이상 감소하게 될 것인데, 과연 그렇게까

지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제재가 잘 작동해서 공식통계에서 북한의 수출이 90% 감소한다면 북한의 성장률은 약 -4%로 관측된다. 특히 제재 대상 중 소규모 단위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들은 밀수형태로 여전히 거래되거나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한의 경제상황이 과거 '고난의 행군' 수준까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생산량이 연간 350만톤, 최근의 식량생산량은 약 500만톤이다. 식량생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씨, 비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석유의 대북수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거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식량생산량이 '고난의 행군' 때의 수준인 350만톤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농업이 받을 충격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줄어들어 농업 및 식량생산에 필요한 트랙터와 같은 농업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재로 식량생산량이 400~450만톤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여유로운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의 기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도의 영양실조(malnutrition)를 야기할 수 있다.

이석: 김병연 교수님께서도 제재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2% 정도로 추정되는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충격을 발생시킬 정도로 식량생산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



장형수: 대북제재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재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보아야 한다. 2016년까지 채택된 대북제재들은 제재 효과가 거의 없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그 당시 전례가 없는 '역대 최강' 수준의 제재조치로 평가받았으나 사실 제재 효과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조치였다. 그래서 2017년 전에 있었던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들은 사실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한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그 다음 2017년에 들어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들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김정일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들이 발생하자마자 제재조치들이 신속하게 결정 되었다. 대북제재 원문을 다 읽고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재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채택된 결의안 2397호부터 제재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재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몇 달 안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6개월,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제재는 아주 훌륭한 제재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조치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상임이사국의 의사에 반하는 제재조치를 채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북한경제를 ‘고난의 행군’ 시대로 회귀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재조치들이 북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저는 전반적으로 앞의 두 교수님과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영향은 미칠 것이고 그 시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효과의 방향과 규모는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북한이 대북제재 영향을 한 번에 크게 받고 적응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또는 그 제재의 악영향을 순차적,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는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시기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2017년 북한의 무역통계에서 북한은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려 15억달러 이상의 공식적인 적자가 생겼다. 이것은 달리 보면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수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계획한 대로 수입하는 것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북한의 외화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그 규모는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하에 이미 축적된 외화를 1년에 4~5억달러 정도씩 풀면서 최소 5년 이상을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북한 당국이 보유한 외화를 아껴두면서 2018년부터 수입 규모를 대폭 감축하여 북한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다. 이에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충격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단, 올해 상반기에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입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재고를 비축하듯이, 북한도 수입품에 대해서 재고를 비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고를 3개월 정도만 비축하면 문제가 없는 반면에, 북한과 같이 원래 단절된 국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재고를 비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년인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군대 비축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위한 외화 축적과 기타 물품의 비축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원유의 경우 중국에서 계속 수입할 수 있을 것이고, 정제품의 경우도 충분히 비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이 부분도 북한 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 비축품을 풀지 않고 충격을 시장으로 바로 전가하여, 민간이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북한이 이 충격에 대해 대응할지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힘들다. 따라서 2018년 상반기에 북한 당국이 하는 조치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북한 당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암시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번째, 대북제재가 2018년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는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제재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봉쇄를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북제재를 버티기로 선택하는 그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드시 완료할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석: 장형수 교수님께서서는 앞선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2017년 제재부터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향후 제재의 영향이나 북한경제의 향방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달려 있고, 그 영향력도 우리의 기대보다는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다.



김석진: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제재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날 것이나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경제 전망을 올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바, 1~3년 정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제재국면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이 2년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제재의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북한경제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인 식량 사정에 관한 것이다. 제재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빠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식품수입부문은 10여 년 전과 최근을 비교할 때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10여 년 전에는 곡물이 주요 수입 품목이었지만, 최근에는 곡물보다는

식용유, 과일 등 밥이 아닌 반찬을 위한 식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그동안 북한의 식생활 수준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재 때문에 외화벌이가 어렵게 되었고 외화를 아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니까 식용유, 과일 같이 북한 기준에서 사치품에 가까운 식자재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 품목의 수입이 줄어들면 북한 식생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특히 그런 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상류층, 권력층의 식생활 수준이 상당히 저하되면서 이들이 경제적 고통을 상당히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제품(정제유)의 양이 제한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석유 제품 공급량의 제한으로 수송연료가 부족해지면 교통 및 유통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시장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 거래 중 식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식량 사정 격차도 크기 때문에 유통 및 수송 사정이 나빠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난의 행군’ 수준의 대기근이 닥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류층 식생활의 질적 수준은 떨어지고, 중하류층 주민의 식량 사정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식량 사정이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북한 당국이 최근 국산화 정책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제재에 대응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화학, 기계, 경공업 등 일부 부분의 일부 품목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처럼 중요한 품목들은 북한의 자체 기술로 대체 생산하기 어렵다. 특히, 수송연료로 사용하는 석유 제품은 석탄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산화하기 어려운 중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더욱 밀접하며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면 정치 상황에서도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북한에서 이런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것을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 후세인 정권도 강력한 경제제재를 당했지만 10여 년 이상 후세인이 계속 정권을 장악한 바 있다.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걸보기에는 김정은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고 정권 유지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모종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무리 없이 권력을 승계한 것처럼 보였고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

시기에 북한의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은 그 기간,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는 정치적 위기의 시기였는데, 제가 정치적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질서, 규율, 통제가 상당 부분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량배급제도도 유지하지 못했고, 또 배급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영경제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었고 '고난의 행군'이 닦쳤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북한의 현재 상황이 겉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권력층과 상류층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지금의 체제나 정권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바꾸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규율과 통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명령과 지시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석: 김석진 박사님께서서는 제재의 중장기적 효과에 주목하여 경제상황의 악화로 정치 규율과 질서가 약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金正은 정권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네 분 모두 제재의 효과와 북한경제에 대해 전반적 사항에는 일치된 의견을 주시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강조점을 제시해주셨다. 다음으로는 현재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남북관계도 발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분위기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혼재하는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김병연: 남북대화 자체를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제재를 하더라도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가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라고 보고 있다. 북미수교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한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ICBM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 종이 한 장 주고 핵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과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우리 정부는 아마도 대화를 잘 활용해 비핵화 협상으로 가기 위한 문을 열어 보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신년사 이후 언론에 오르내리는 북한의 '선남후미(先南後美)', 즉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자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제시하는 가격이 지금은 흥정이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부르는 가격과 미국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올해 언론 칼럼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지금 북한과 대화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의 꼬리를 잡고 개를 흔들려는 시도와 같은데, 개의 꼬리를 잡는다고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다.

제재의 작동을 위한 실효 수위와 협상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평창올림픽에 대한 협상은 제재가 완전히(full-scale) 들어가기 전에 남북한 상호 관심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화를 활용하여 평창올림픽을 잘 치르고 군사적 긴장 완화까지 계속 끌어간다면 그것으로 일단 성공이다. 동시에 원칙(principle)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여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 대화는 하되 제재는 계속해서 북한의 협상력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재가 들어간 정도는 현재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인데, 80점 정도 될 때까지는 냉정하게 몰아붙여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이석: 현재 국면 자체는 나쁘지 않고 대화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는 낙관적 측면보다는 비관적 측면이 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양문수: 이번 남북대화는 종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오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재개되고 하루 만에 공동보도문을 작성한 것에서 북측이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은 과거에는 핵문제만 언급해도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담이 결렬되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양측이 서로의 관심 의제를 이야기하고 북한도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에는 평양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비해 금번 대화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번 회담을 챙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현재 상황 인식은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고,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북미관계가 풀려나가야만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는 즉각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 축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나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경험 관련 이슈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고 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번의 남북회담에 대해 백일 평화체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종의 모색기간 또는 실험기간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서로 자제하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를 토대로 남북이 만나면서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북 간에 사회문화교류까지 이어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조금 쌓여가고 여건이 성숙하다면 더욱 큰 의제를 다루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모색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생각 차가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경우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 모두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석: 양문수 교수님께서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낙관과 비관이 공존할 수 있겠으나, 한국의 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명확하고, 현재 서로가 성의를 보이며 경제협력 이슈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상황이 잘 안 풀릴 경우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주셨다.

김석진: 북한문제는 항상 남북문제라는 측면과 국제문제라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지금은 국제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남북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대화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면에서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대화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예비적인 탐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남북대화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본다.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전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방침은 항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키면 경제협력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 사회문화체육교류나 인도적 지원 등은 북측이 수용한다면 우리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다.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당국 간 인도적 지원은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유엔 산하기구들에 지원하기로 작년에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다. 이것을 계속 이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석: 국제적 요인이 남북관계의 기본적 제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예로서 민간 부문의 대북지원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장형수: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은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은 어느 시대이든 항상 했어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분야이다. 남북대화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고, 한다고 해서 당장 큰 효과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는 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남북대화가 남북경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 2397호가 채택된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1718 제재위원회’에 예외 사항을 제기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대북제재 흐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은 힘들다.

남북대화만 이야기할 때 남북대화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 과거에 남북대화를 진행했다면 남북경협으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 북한의 핵 개발에 다소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생각해볼 것은 5년 전에 시간이 누구의 편이였냐는 질문이 될 텐데, 우리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고 북한은 북한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의 손발은 묶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남북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의 생각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는 것이다.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결국은 남북대화가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레버리지, 즉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金正은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인들의 논리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 이상할 것이 없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관계에서 선순환이 되면 좋을 것이나 북한이 보는 관계는

항상 북미대화가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남북대화였다는 점이다. 우리 쪽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북한이 우리와 만나는 것이 꼭 경제지원을 바라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는 이 생각이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외에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제재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후의 보루로 지원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는 북미대화에 종속된 것이고,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남쪽에 노크하는 식이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북한의 스타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남북대화는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규모는 전 세계 평균 이상, 즉 스웨덴, 스위스, 이태리 등 OECD 35개국의 평균 지원 규모를 고려해볼 만한 것 같다.

이석: 『KDI 북한경제리뷰』로 주제를 옮기기 전에 혹시 제재와 북한경제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양문수: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외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치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의 본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양자의 괴리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재로 인해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권력층 내지는 권력기관들의 외화 수입이 되겠지만, 상부가 받은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하부로 전가될 것이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인데, 북한은 특히 준조세가 발달되어 있어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부로 부담이 이전되고, 결국 제재의 본래 타겟이 아닌 하층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당국이 시장활동을 풀어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회 하층부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로 인해 하부에서 지지점이 형성된다면 경제제재가 정치적 위기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중장기적 제재 효과를 본다면 결국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현재는 트럼프의 압박 공세에 중국이 상당히 수세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중국 측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 11월 『한구시보』에는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도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 보도되었고, 중국 학자들도 최근 외국 학자들과 만날

때, 중국의 대외정책이 국내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한다. 여기서 국내적 여건은 제재로 인해 중국의 지방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종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다.

김병연: 북한 경제와 제재에 대해 추가하자면, 제재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생활하는 대부분의 북한 관료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대응을 할 것이다. 배급도 못하는 상황에서 옛날처럼 군주 정치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 김정은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90°로 절까지 했다. 만약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면 북한경제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스마트’해져서 국가 자산을 팔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면 장기적으로 체제 이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 김정은이 제재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겠지만, 이것에 따른 여파가 김정은에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음으로 중국 요인이다. 현재 제재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 기대도 좋지 않다. 일단 중국이 북한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제재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약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조짐을 보인다면 중국은 밀수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제재 압박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즉, 제재라는 것이 현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그만큼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도 압박을 계속해야 하며, 압박의 강도도 더욱 강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재의 최대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향후 2년 정도로 본다. 2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재가 수명을 다해 갈 수 있다. 단기간 최대의 압박을 통해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장형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항복하고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로 가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만약 한·미·일이 경제봉쇄로 가더라도 북한은 쿠바처럼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봉쇄보다 약한 해상차단만으로는 물론 북한을 굴복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재의 국제안보질서하에서는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6개월~2년 안에는 핵 고도화를 완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항복하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의미이다.

김석진: 앞에서 양 교수님께서 권력층이 일반주민에게 제재의 부담을 전가하려 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논의를 보충하자면, 지난 2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생각, 관행, 규범이 많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순순히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20여 년 전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농민들에게 식량을 뺏어 도시 주민들에게 배급해야 하는데 그 당시 농민들은 순순히 식량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농민보다는 도시 주민들이 훨씬 많이 굶어 죽었다. 그 시절에도 그냥 당하지는 않았고 지금은 더더욱 당하지만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수동적 저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 긴장, 심지어 위기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함부로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이석: 지금까지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를 들었고, 이어 다음 주제로는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국내의 북한경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형수: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외부세계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숫자와 통계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연구는 상당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없다는 미명하에 너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글이 생산된다는 점이 제일 눈에 띄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 즉 첩보에 바탕을 둔 복수의 대북 정보 소식통이라는 명목으로 글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거의 90%가 오보나 과대표장으로 밝혀지고 있다.

학계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보고서나 논문을 쓰게 되면, 그 저작물을 다른 연구자가 인용하고 다시 다른 연구자가 한 3번 정도만 인용을 하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동의된’ 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극히 일부이지만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과대포장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서 북한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

일반적인 학계 동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용에 대한 부분이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한 연구 결과, 혹은 기자가 취재원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해외 언론보도는 대부분이 오보, 중복보도, 과장보도, 지연보도로 밝혀졌었다. 이런 불분명한 해외 언론보도들은 우리 학자들이 아예 인용을 삼가는 쪽으로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연: 비슷한 생각이다. 그동안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자고 하면 아마 제일 큰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을 연구하는 집단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량의 부족은 검증된 숫자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개인적인 이념 또는 정치적인 편향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북한 연구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에 경제학자로서 바라는 바는 객관적인 분석이 북한 연구의 주가 되었으면 한다.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옛날에는 과연 북한이란 분야에 경제학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는 시선을 많이 받았다.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북한경제 분석을 통해 무언가 인사이트를 받고 배우려고 하는 점이 커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확장되길 바란다.

경제는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심사하는 것에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체계적인 검증 과정과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학계에서는 이 점이 미진한 것 같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북한 전문가의 수이다. 새로운 북한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아 연구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 연구 결과를 단기간에 활용하는 데만 관심을 쏟지 않고 공공재로서 북한 연구의 기능을 정부가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지적 역량 발전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문수: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바다.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경제

연구 전반에 축적된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 관련 연구자 그룹 중에서도 특히 경제분야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학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연구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들이 기초연구나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북한 연구가 나름대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축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핵심적 이슈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과거 7·1조치가 나왔을 때에는 이후 2~3년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7·1조치는 북한이 『조선신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많이 공개한 반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차이도 감안해야 하겠으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내용 측면에서는 훨씬 진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과거보다 동력이 떨어져 제대로 파고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축적된 연구 성과가 없다 보니 훨씬 복잡해진 대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논의들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의 국가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유기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 양적으로는 현안들을 쫓아가고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다소 정체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는다. 예컨대 제재의 효과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경제가 90년대 위기를 거치고 난 후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한편으로는 이행기 경제와 개도국 일반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현상 분석에 그치고, 신진 연구자가 나오더라도 자기 분야에만 일부 자극을 줄 뿐, 전체 학계에 선순환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석: 양문수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느끼는 바가 많다. 현안은 비교적 잘 쫓아가고 있으나 과연 이것이 축적된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지, 전체 연구자 집단이 다소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우려를 표해주셨다. 상대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통일연구원에 계신 김석진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김석진: 북한경제 연구 수준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자료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가 문제인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대해 나온 제일 중요한 자료와 정보는 역시 유엔 산하기구가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조사한 결과들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센서스, 영양상태, 식량생산 상황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경험을 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저개발 국가도 자료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런 정보를 더 얻기 위해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나 세계은행 등이 저개발국에서 상당히 많은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런 조사 작업 중 극히 일부분만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다른 저개발국에서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지금까지 그런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북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지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와 연계해서 조사 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너무 북한 연구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전환국, 저개발국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성과를 북한경제연구에 더 많이 흡수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체제전환국보다는 저개발국으로서 가지는 특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관련 연구를 북한에 더 많이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구상할 때에도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 또 국제사회가 저개발국과 상업적 무역과 투자를 실시한 경험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해서 남북경협 구상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구 공동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 연구자들이 국제개발 연구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석: 마지막으로 『KDI 북한경제리뷰』의 편집위원으로서 『KDI 북한경제리뷰』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부분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앞으로 『KDI 북한경제리뷰』가 좀 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북한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북정책 토론은 외교안보 분야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DI 북한경제리뷰』가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당장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 이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KDI 북한경제리뷰』로서의 특성을 좀 더 살리면 올해는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에 열심히 참여했던 민간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 토론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건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북지원에 참여했던 전문가, 국제 NGO 활동가들과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민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석: 지금까지 정책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학자들과 비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다방면으로 토론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올해 인도적 대북지원 주제는 반드시 다루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양문수: 『KDI 북한경제리뷰』가 북한경제 연구의 중심을 지향하는 저널로서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는 핵심 논의들을 모아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KDI 북한경제리뷰』를 보면 북한경제 연구의 유의미한 트렌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앞서 언급된 스크리닝의 필요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단순 취합을 넘어 논의를 정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주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어 있는 반면,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부족하고, 달러라이제이션이나 인플레이션도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경험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북한의 현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일종의 연구사 정리 작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연구 동향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일동, 조병구 박사님 퇴임 기념 특집호에서 일부 유사한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1~2년에 한 번씩 ‘북한경제 연구동향’ 혹은 ‘현 단계 북한경제 연구 이슈’를 정리해 준다면, 연구를 선도함과 더불어 연구자들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겠다.

협업 측면에서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체제 이행, 국제개발협력 등 타 분야 전공자들과 함께하는 대담을 기획해 볼 수 있겠다. 북한경제 연구자들과 타 분야 전문가들을 잇는 매개체가

되고, 북한경제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득 스치는 생각인데, ‘이슈와 토론’ 혹은 ‘이슈와 쟁점’을 연중 시리즈로 기획해, 현 단계 북한경제의 쟁점과 이슈를 제시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좌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필진들이 정리한 결과를 실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김병연: 국내에서도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북한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해외 연구자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해외 연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아마도 언어와 데이터일 것이다. 아무래도 한국 연구자보다 데이터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있어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해외 수요를 감안해 『KDI 북한경제리뷰』가 국제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제재라는 것은 대북공조가 필요한데,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연구자들 위주의 북한경제 분석보다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화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하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이석: 양문수 교수님께서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논의를 모아서 정리하고, 동향을 소개하여 연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여 이야기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보자는 제언을 주셨다. 김병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국제화도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형수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형수: 제가 생각하기에 『KDI 북한경제리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월 발간되는 북한경제전문지이고,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KDI 북한경제리뷰』가 진행되는 방식과 발간되는 연구논문과 자료들이, 사실은 편집위원회들을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결정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재 『KDI 북한경제리뷰』가 북한경제 연구 분야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KDI 북한경제리뷰』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더 보완해나가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KDI 북한경제리뷰』가 북한경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검증된 정보에 의한 북한경제 연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슈와 토론’이라는 코너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경제리뷰에서

그 당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를 살펴보는 코너인 '동향과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동향과 분석'에서 검토된 연구들이 축적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한경제를 설명하는 주요 이슈들이 생산될 텐데 이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코너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시장화와 제재의 영향과 같이 북한경제와 북한경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슈들이 생겨나는데 이 이슈들을 사실관계 검증에 입각하여 집약·정리하는 코너를 제안하고 싶다. 앞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명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집약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연구 주제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KDI 북한경제리뷰』가 앞으로 북한경제 연구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석: 오늘 네 분의 외부 편집위원들을 모시고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북한경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KDI 북한경제리뷰』의 독자들도 이에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